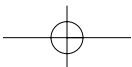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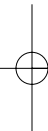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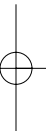


## 부 록

1. 국가인권위원회 제·개정 법령
2. 국가인권위원회법
3.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연혁 및  
주요업무 일지
5. 국제기구 권고사항
6.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8. 발간자료 목록
9. 진정서 양식
10.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서



## 국가인권위원회 제 · 개정 법령

### 1. 법률 및 대통령령

- 가.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법률제6481호)
-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2002. 2. 9 대통령령17517호)
- 다.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2002. 2. 4 대통령령17512호)

### 2. 규칙

- 가.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2002.6.17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제10호)
- 나. 국가인권위원회등증표에관한규칙(2001.11.2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호)
- 다.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2002.9.9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3호)
- 라.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2001.10.11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호)
  - 개정 제1차 2001.11.2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4호
  - 제2차 2001.12.20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5호
  - 제3차 2002.3.14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8호
  - 제4차 2002.12.23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4호
- 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2002.8.2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제12호)
- 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2002.6.17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1호)
- 사.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2002.5.23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9호)
- 아.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2002.1.10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6호)
- 자.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2002.3.8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7호)

## 부 록

차.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2002.9.9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3호)

### 3. 훈령

- 가. 국가인권위원회고문번호사규정(2002.2.20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2호)
- 나.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2002.9.2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11호)
- 다.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2002.6.25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9호)
- 라.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2002.3.28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4호)
- 마. 국가인권위원회위임·전결규정(2002.5.23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6호)  
개정(2002.6.29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10호)
- 바. 국가인권위원회인사자문기구규정(2002.3.8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3호)
- 사. 국가인권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의운영규정(2002.5.21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5호)
- 아.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정(2002.6.21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8호)
- 자. 인권자료실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2002.9.27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12호)
- 차. 전문상담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2002.6.20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7호)

### 4. 예규

- 가.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2002.5.2 국가인권위원회예규제1호)

### 5. 지침

- 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2002.4.1 사무총장지침제1호)

나.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련된운영지침(2002.4.18 사무총장지  
침제2호)

## 6. 폐지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규정

제정 2001.8.20 국무총리훈령제420호

폐지 2001.11.25

나.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규칙

제정 2001.11.8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2호

폐지 2001.11.26

다. 국가인권위원회인사위원회규정

제정 2002.1.31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호

폐지 202.3.8

라. 인권침해및차별행위진정접수지침

제정 2002.11.22 국가인권위원회내규제1호

폐지 2002.4.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 5. 24 법률제6481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보호소
  -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 부 록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 및 위원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인권위원회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위원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부 록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 3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

## 부 록

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 부 록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 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

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 부 록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 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 부 록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 (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부 록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 (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조정위원중 2인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1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하며, 조정위원 3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조정)** ①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 부 록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조정 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 부 록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장 보 칙

**제51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 6 장 별 칙

**제56조 (인권옹호업무방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

## 부 록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 (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 인 권 위 원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김창국	· 서울대 법과대학 4학년1학기 수료 ·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 수료	·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부장검사(전주, 광주지검) · 제82대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한국방송공사 이사 · 제2기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 · 참여연대 공동대표	
위원(상임) 박경서	· 서울대 사회학과 · 독일 괴팅겐대 석사 · 독일 괴팅겐대 사회학박사 · 인도 센나이한림원 명예 철학박사	· 서울대 사회학과 초빙교수 · 참여연대 고문 ·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 크리스찬아카데미 부원장 · 스위스 제네바 WCC 아시아 정책위 의장 · 성공회대 석좌교수 ·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위원(상임) 유 현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 수료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광주·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위원(상임) 유시춘	· 고려대 국문학과	· 민가협 총무 ·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민족문화작가회의 상임이사 · 민예총 이사 · 공정선거 민주개혁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민정치연구회 정책실장	

## 부 록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 조미경	· 서울대 법대 · 한양대 법대 · 서울대대학원 법학석사 ·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 아주대 법학부 교수· 법학부 부장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 수원법조윤리협의회 위원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위원 김오섭	· 고려대 법학과 · 서울대 사법대학원 수료	· 제6회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민·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변호사	
위원 신동운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 대학원 형사법 석사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편집위원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편집위원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대법원양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장 겸 교무담당부학장	
위원 정강자	·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교육담당 간사 · 민중교육연구소 연구원 · 석탑노동연구원 상담원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문위원 · 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 여성부 차별개선위원회 위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위원 김덕현	· 한양대 법학과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변호사 · 예방접종 심의위원 · 형사법개정특별심의회 위원 · 국무총리자문기구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무부 및 법제처 자체심사평가 위원회 위원	

부 록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 이진강	· 고려대 법학과 · 서울대 사법대학원 수료	· 제5회 사법시험 합격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1과장 · 서울고등검찰청 검찰관 · 수원지방법검찰청 성남지청장 · 변호사 · 행정심판위원 · 제8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02. 11. 30 위원직 사임
위원 곽노현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수료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석사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박사과정 수료	· 참여연대 발기인 · 집행,운영,지도위원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 집행위원장 ·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 교육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 방송대학교 법학과 교수	※ 2003. 2. 24 위원직 사임
위원 유국현	· 서울대 법학과 · 단국대 대학원 수료 · 서울대 대학원 수료 · 미국 조지워싱턴대 수료	·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 육군 법무관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영월지청장 · 법무부 인권과장 · 강릉 지청장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3. 2. 24 위원직 사임

사 무 총 장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최영애	·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위원장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 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서울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성과 인권위원회〉 위원장 ·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위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연혁 및 주요업무 일지

### 국가인권위원회 발자취

1993년 6월 빈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한 이래,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후 3년여 간에 걸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 1993년

6월 빈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

####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대선공약 발표(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 1998년

3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100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

9월 17일 인권법제정및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 부 록

### 결성

- 9월 25일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 10월 14일 인권법 관련 제1차 당정협의 (법무부 ‘법인안’ 과 국민회의 ‘국가  
기구안’ 간 입장 차이로 결렬)
- 10월 19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특별자문관 브라이언 버디킨(Brian  
Burdekin)과 간담회 개최
- 10월 23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  
부 장관에게 제1차 공개서한 송부( ‘법무부안’ 에 대해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결여 지적)
- 10월 26일 공추위, ‘공추위법안’ 최종 확정
- 11월 27일 법무부-국민회의 제2차 당정협의  
법무부 1차 수정안 발표(이사회 제도 폐지, 임시구제 조치권 부여  
등 일부분 개선, 특수법인 형태 고수)
- 12월 4일 국제엠네스티,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2차 공개서한 송부(법무부수  
정안 비판)
- 12월 5일 공추위, 명동성당 앞 기자회견 및 대국민 캠페인 전개

### 1999년

- 2월 9일 인권법 관련 법무부-국민회의 제3차 당정협의 개최  
법무부 2차 수정안 제시했으나 당정간 입장차이로 결렬  
공추위, 국제엠네스티, 법무부 2차 수정안 비판
- 3월 22일 법무부-국민회의 제4차 당정협의, 법무부 3차 수정안 제시  
3차 수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기습 타결
- 3월 30일 공추위, 인권위 독립성 · 권한 강화요구 및 국무회의 상정저지 집회  
인권법안 국무회의 통과
- 3월 31일 민주화운동 원로 30여 명, 인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4월 7일 인권활동가 30여 명, 정부 인권법안 철회와 인권법 재논의 촉구,



- 7일간 단식농성 돌입
- 4월 9일 국제엠네스티, 국제고문방지기구(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로버트케네디추모인권센터(Robert F. Kennedy Memorial Center for Human Rights)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인권법 제정과정의 투명성과 민간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 4월 12일 유엔인권위 참가 민간단체 대표단, 제네바에서 브라이언 버드킨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면담
- 4월 16일 공추위, ‘인권법안 국회 상정저지’ 결의대회 개최
- 4월 19일 공추위 대표자회의, 공추위 확대·개편 결의
- 4월 22일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여야의원 대부분이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 법사위 제1소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  
공추위, 인권법안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개최
- 4월 29일 공추위 확대·개편대회 개최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로(공대위)’ 개편(70여 개 민간단체 참여)
- 6월 16일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 최종 확정
- 12월 20일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인권단체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수 없다”며 인권법 제정 연기 선언

## 2000년

- 1월 3일 대통령 신년사(‘인권법’의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힘)
- 7월 19일 공대위대표자회의 “법무부의 인권위원회법안 재상정을 반대한다” 성명 발표
- 8월 21일 법무부 공고 제2000-31호, 인권법 입법예고(인권위원회를 비법인 민간기구로 설치하는 내용)
- 9월 5/6일 공대위,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

## 부 록

- 원회법안 토론회” 개최
- 10월 28일 공대위, 정대철 위원장(새천년민주당 인권향상을위한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 개최
- 11월 6일 공대위, 리영희 · 이돈명 · 박용길 · 최영도 · 한상범 등 민주화 원로들과 간담회 개최
- 11월 27일 공대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인권법을 비롯한 3대 개혁입법 재개정 촉구 농성
- 12월 3일 공대위, 민주당안에 대한 전면 거부입장 천명
- 12월 13일 여야 국회의원 95인이 서명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출(민주당 이미경 · 김원길 의원 등 61명, 한나라당 이부영 · 김원웅 의원 등 31명,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 3명)
- 12월 14일 민주화 원로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가보안법을 연내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성명 발표
- 12월 18일 인권 2대 현안 연내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 12월 28일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제2차 단식농성(명동성당)
- 12월 31일 공대위,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개혁을 위한 송구영신 문화제” 및 “개혁 입법들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주최

## 2001년

- 1월 8일 공대위, 민주당 7인 소위원회와 연석회의
- 1월 19일 민주당 7인 소위원회 최종회의,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는 ‘인권법 시안’ 확정
- 2월 1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잠정 결정
- 2월 7일 공대위 “3대(인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 제정) 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선포식” 개최

## 부 록

- 2월 9일 민주당, 당정합의 “국가인권위법안” 확정(민주당 소위와 법무부 차관 공동기자브리핑)
- 2월 12일 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 “인권위원회법안” 확정
- 2월 13일 민주당 당무회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정대철의원 대표 발의) 추진  
공대위, 민주당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인권활동가 25명 민주당사 농성
- 2월 14일 민주당, 인권위법안 국회 제출
- 2월 20일 공대위, 탑골공원에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철회촉구와 개혁실종 규탄대회” 개최
- 2월 21일 ‘개혁쟁취를 위한 사회각계 인사 10,000인 시국선언’
- 2월 23일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국회 제출  
국회 법사위,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상정
- 2월 26일 공대위, 민주당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민주당사 앞 1인 피켓 시위
- 3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4월 24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개최
- 4월 26일 공대위, “국가인권위법 4월회기내 처리합의에 관한 3당 총무 합의와 법사위 심의에 대한 성명” 발표
- 4월 30일 국회법사위법안심사소위, 심의 후 민주당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출하여 표결처리 발표  
공대위, “개혁실종, 졸속심의 기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공대위 성명” 발표  
국회법사법안심사소위, 민주당수정안 표결(찬성4, 반대3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민주당 수정안 표결(찬성8 반대7 통과)  
국회 본회의(제221회 임시국회), 법사위원회안(민주당 수정안) 찬성 137, 반대 133명,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통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의결

## 부 록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법률 제6481호)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과정

### 2001년

- 8월 1일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내정 발표
-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
- 8월 28일 前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대표 등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시작
- 9월 24일 국가인권기구 현황파악 및 아·태지역 교류협력을 위하여 APF 연례회의 및 인도·스리랑카 인권기구 방문(정영선, 임순영, 이정은)
- 9월 27일 법제 운영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영국 런던에 있는 인종평등위원회 방문(조효제)
- 10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위원장 : 김창국  
상임위원 : 박경서, 유현, 유시춘  
비상임위원 : 이진강, 정강자, 곽노현, 김덕현, 김오섭, 신동운, 조미경
- 10월 11일 제1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제청안에 대한 심의 등 5건 처리
- 10월 25일 제2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자문위원회규칙(안)」 논의 등 7건 처리
- 11월 8일 제3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규칙(안)」 등 6건 처리
- 11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수정안)」 의결 등 2건 처리
- 11월 22일 제5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개정안」 수정의결 등 5건 처리

- 10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개최
-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 해단식 및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 발대식

## 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

### 2001년

- 11월 26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상담 및 접수 개시  
(첫날 진정접수 122건)
- 11월 28일 제1차 상임위원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대책(안) 논의
- 1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과 관련, 국회 해당 상임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할 것을 요청  
제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울산구치소내 피의자 의문사 사건 조사개시 등 5건 처리
- 12월 3일 구금시설 첫 면전진정 실시(청송감호 보호소, 대구교도소) 및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조사
- 12월 4일 제1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사건과 양심적 집총거부자 진정 사건 조사 결정 등 2건 처리
- 12월 7일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청문회 개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및 특별인권수업(서울 교동초등학교)
- 12월 11일 제1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정보공개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

## 부 록

- 12월 12일 제2차 상임위원회  
「테러방지법」 청문회 결과보고
- 12월 13일 제6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규칙안」 등 2건 논의  
제2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사건 현장조사 결과 보고
- 12월 15일 제2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사업계획안 논의
- 12월 17일 제2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행위 조사결정 등 2건
- 12월 20일 제7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개정(안)」 등 2건 의결
- 12월 21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국회법사위 제출
- 12월 24일 제3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전과자 차별 조사결정 등 2건 처리
- 12월 27일 제3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울산구치소내 의문사 진정사건, 검찰총장에 수사 개시 의뢰

## 2002년 1월

- 1월 7일 제3차 상임위원회  
목포교도소 긴급구제 요구사건 논의
- 1월 10일 제8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안)」 의결  
제4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대구교도소 의료조치요구 사건 조사개시 등 2건 처리
- 1월 14일 제4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 제천시 장애인 차별사건 전원위원회 상정키로 의결
- 1월 21일 제3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 논의
- 1월 24일 제9차 전원위원회  
면정진정시 구금시설의 반응 및 조치검토사항 논의
- 1월 28일 제10차 전원위원회  
제천시 장애인 승진차별사건 진술청취
- 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직제령 국무회의 통과 ; 5국 18과 1소속기관(인권  
자료실), 정원 215명(자체정원 180명, 파견공무원 20명, 전문위  
원 15명) 확정, 2002년도 예산 192억원 확정
- 1월 31일 제5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족보삭제 등 진정사건 각하 등 23건 처리

## 2002년 2월

- 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월 7일 제4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 의견제출 결과보고 등 3  
건 처리
- 2월 14일 제11차 전원위원회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제규칙」 의결
- 2월 18일 제4차 상임위원회  
청송 제2교도소 장기징벌자 긴급구제 조치안 등 4건 처리
- 2월 19일 최영애 사무총장 임명
- 2월 20일 국가정보원이 입법 추진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정 반대 의  
견 제출(국회의장,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법사위원장)
- 2월 25일 제5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귀화 요청 진정사건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이송 등 15건 처리

## 부 록

-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특채 원서접수 마감(2002. 2. 15~26),  
71명 모집에 총 2,469명 지원
- 2월 27일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
- 2월 28일 제12차 전원위원회  
조정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 5건 처리

## 2002년 3월

- 3월 4일 제5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등 2건 처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엔 제10차 아·태지역 워크숍 참가(김  
선민)
- 3월 7일 정년연장 불승인 등 진정사건 31건 처리
- 3월 11일 제5차 상임위원회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건 등 2건 논의
- 3월 14일 제13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개정(안)」 등 2건 수정의결
- 3월 21일 제6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지방 방법원 차별행위 재검토 등 11건 처리  
제7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B형 간염보균자 취업금지 등 진정사건 30건 처리
- 3월 28일 제14차 전원위원회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 논의  
제8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공갈관련 진정사건 등 12건 처리
- 3월 29일 제6차 상임위원회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한 논의



## 2002년 4월

-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입주 및 사무처 발족
- 4월 4일 제3차 공무원 전입(지원자 115명, 채용인원 27명)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국회 방문
- 4월 8일 제7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인제대학교 장애인 차별사건 등 2건 처리
- 4월 9일 제7차 상임위원회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
- 4월 11일 제15차 전원위원회  
제천시의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권고 외  
3건 처리
- 4월 15일 제6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관련사항 검토 등 4건 처리
- 4월 22일 제8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교포에 대한 차별 재검토 등 6건 처리
- 4월 23일 제8차 상임위원회  
진주교도소 AIDS환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건의 및 외부병원 이송  
치료권고
- 4월 25일 제16차 전원위원회  
불기소불공정처분에 대한 진정사건 등 4건 처리  
제9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직권남용 등 진정사건 30건 처리  
제9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인제대학교 장애인 차별사건 합의추진
- 4월 30일 정보화 기반시스템 및 전산실 구축

부 록

2002년 5월

- 5월 2일 제7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5건 처리 ☞ “해외여행 규정” 삭제 권고(통일부)
- 5월 7일 제9차 상임위원회  
AIDS 환자 긴급구제결정 불이행에 따른 위원회 입장 논의  
제10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인제대 장애인 차별건 전원위원회 상정 등 58건 처리
- 5월 9일 제17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안)」 등 6건 논의  
제10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산 만덕복음병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등 60건 처리
- 5월 10일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 병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 및 환자들의 거주이전 및 자치권 등이 확보되도록 권고(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외국인노동자)  
Asian Legal Resource Center(ALRC)의 쉐리양 중국 대법원 부장판사등 8명의 방문단이 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을 파악코자 방문
- 5월 11일 홍콩 인권법센터 리알 순가소장 등 5명의 아시아 NGO 홍보단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입을 독려하고자 방문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센테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자진신고센터)
- 5월 13일 제8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계획 등 8건 처리
- 5월 15일 정책간담회(중국동포)

부 록

- 5월 20일 제11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출석조사 등 60건 처리
- 5월 21일 호주대사관의 Mary-Jane Liddicoat 일등서기관 등 2명이 인권위의 기능 및 활동상황을 파악하고자 방문
- 5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정  
제18차 전원위원회  
대구가톨릭대학의 신입생 합격처리에 있어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권고(진정인 합격처리,9.17) 등 10건 처리  
제1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미신고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대상 여부 논의 등 57건 처리
- 5월 24일 정책간담회(아동·청소년)  
일본 인권포럼 21(NGO)의 아에카와 미노루 포럼 총괄연구원등 5명이 일본 인권옹호법과 한국 인권위법과 비교 분석하고자 방문
- 5월 27일 제9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국무총리실,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 대회기간 중 집회·시위의 자유보호, 노동기본권 행사보장, 불법체류자 단속의 자제 권고 등 3건 처리  
제12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6.13선거 관련 장애인 투표장 접근 편의성 여부 직권조사 등 2건 처리
- 5월 29일 월드컵대회 기간 중 「인권현장 확인반」활동 전개  
제10차 상임위원회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등 4건 논의
- 5월 30일 제12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불법 감시 등 진정사건 37건 처리
- 5월 31일 정책간담회(노인)

부 록

2002년 6월

- 6월 2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들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 국가인권기구 및 APF 방문(사무총장, 김형완, 이호영, 이승미)
- 6월 3일 제13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학위에 의한 차별사건 기각 결정 등 51건 처리  
일본 변호사연합회 후지와라 세이고 변호사 등 12명이 일본인권 옹호법제정관련 한국 위원회법의 제정경과와 주요 업무파악을 위해 방문
- 6월 4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권고
- 6월 7일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 등 인권 분야 총 29개 과제 발주
- 6월 11일 제11차 상임위원회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등 2건 처리  
제10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통신보호비밀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권고(정보통신부) 등 7건 처리 ☐ 검사 승인 없는 장시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조항 삭제  
제4차 공무원 특채(지원자 106명, 채용인원 13명)
- 6월 14일 정책간담회(재소자)
- 6월 15일 공소시효배제입법 토론회 개최
- 6월 17일 제19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및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실에관한규칙」 제정 등 11건 처리  
제11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에 대한 논의 등 3건 처리  
제13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당한 면허취소 등 진정사건 47건 처리  
제14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 형의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국립묘지 안장차별 행위 등 41건 처리
- 6월 21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인권국장 등 2명이 한·뉴질랜드 국제인권 분야 연대 강화를 모색코자 방문
- 6월 24일 제12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성전환자호적정정법률(안)」검토 등 3건 처리  
제15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대구대학교 복학차별에 대한 진정사건 논의 등 36건 처리
- 6월 27일 제20차 전원위원회  
청송교도소 거식증환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권고 등 5건 처리  
제14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청송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요구 등 53건 처리
- 6월 28일 정책간담회(장애인)

## 2002년 7월

- 7월 2일 제12차 상임위원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련 진행상황 청취
- 7월 8일 제13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권실태 연구용역사업 진행상황 보고  
제16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부당한 재판에 대한 진정건 기각 처분 등 33건 처리
- 7월 11일 제21차 전원위원회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있어서 원격대학 수료자 차별에 대한 구제 권고(보건복지부) 등 4건 처리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0.19)  
제15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당수사 및 판결 등 진정사건 58건 처리

## 부 록

- 7월 14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들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워크숍 참가(유현 위원, 유시춘 위원, 김은미, 김수산)
- 7월 18일 제16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당수사 등 진정사건 52건 처리
- 7월 20일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안)」관련 의견 제출(대통령 비서실)  
강릉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복지시설 위탁 해지사유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
- 7월 22일 제14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신과 치료병력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손해배상 등 권고 등 10건 처리  
제17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비전향 장기수 복송차별, 전원위원회 회부 결정 등 29건 처리
- 7월 23일 월드컵 기간 중 집회·시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 평상시는 물론 특히 국제행사시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경찰청)  
제13차 상임위원회  
인권논문 공모사업 추진계획 등 2건 논의
- 7월 25일 제22차 전원위원회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에 대한 권고(기술표준원) 등 6건 처리 ☞ ‘살색’을 ‘연주황’으로 개칭(11.27)  
제17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경찰청 등 사생활 비밀침해사건 등 65건 처리
- 7월 30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따른 정책권고(행정자치부, 경찰청, 감사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정

## 2002년 8월

- 8월 6일 제15차 상임위원회  
인권논문 공모사업 논의
- 8월 7일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 나카오 아키라 검사 등 3명이 일본의 인  
권옹호법제정관련 우리 위원회법 및 활동상황 파악코자 방문
- 8월 9일 유엔인권위원회 이완희 UNDP 몽골사무소 국제인권자문위원등  
2명이 우리 위원회 활동상황 파악하고자 방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선인 동포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집행정  
지 권고  
제18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나이를 이유로 한 강릉대학교 교수모집 차별 시정권고 의결 등  
38건 처리
- 8월 12일 경찰, 검찰, 교도관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총 30  
회, 총인원 4,420명)  
제15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정부의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 재검토 권고 등 6건 처리  
☞ 산업연수생제도 단계적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국무조정실)
- 8월 16일 주한미2사단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부과
- 8월 19일 제18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진주교도소 진정방해사건 등 4건 처리
- 8월 20일 제19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자살은폐 조작 등 진정사건 64건 처리
- 8월 21일 제20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당한 징벌 등 진정사건 110건 처리
- 8월 22일 제23차 전원위원회  
교도소 AIDS환자 수용자 등의 면전진정방해에 대한 소장 등 관

## 부 록

- 련자 징계권고 등 9건 처리  
 제2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구로경찰서 불법 알몸수색 진정사건 권고결정 등 21건 처리  
 제19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광고게재 차별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6건 처리  
 8월 23일 일본고베대학교(형사법학회) 미즈이 마코토 교수(일본형사법학회  
 장) 한국인권위원회법 및 위원회활동을 파악하고자 방문  
 8월 26일 제24차 전원위원회  
 전향 및 장기수 복송차별에 대한 진정 등 3건 처리  
 제16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표명 외 3건 처리  
 8월 29일 제22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의료관련 등 진정사건 17건 처리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002년 9월

- 9월 2일 제16차 상임위원회  
 정보공개 청구건 의결  
 9월 5일 제23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인격권 침해 등 진정사건 15건 처리  
 9월 9일 제25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제정 등 7건 처리  
 제17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등 4건 처리  
 ☞ 차별금지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및동법시행령」 개정권고(교육인적자원부)  
 제20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 부 록

- 장애 판정에 있어 남녀차별 개정권고 전원위원회 회부 등 42건 처리
- 9월 10일 위원장 초청간담회(인권일반 단체)
- 9월 12일 제5차 공무원 특채(지원자 134명, 채용인원 9명)  
제17차 상임위원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 러시아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명령 집행정지 의결
- 9월 16일 제21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형의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신규교원 임용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등 42건 처리
- 9월 17일 위원장초청간담회(법률 단체)  
제24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청송 제1보호감호소 등 4개 시설 방문조사 결정 등 4건 처리
- 9월 22일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캐나다 국가인권기구 방문  
(곽노현 위원, 교육협력국장, 이석준)
- 9월 23일 제26차 전원위원회  
알몸수색 인권침해 진정건 등 7건 처리  
제18차 상임위원회  
연간보고서 등의 발간 기본계획(안) 확정  
제18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등 5건 처리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포함 권고(청소년보호위원회)
- 9월 26일 제25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수원 구치소 환자 방치사건 등 4건 처리  
캐나다 치할리스 원주민 추장등 8명이 소수민족관련 인권상황을 파악코자 방문
- 9월 27일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12호) 제정

## 부 록

- 9월 30일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건 의결  
9월~10월 인권교육 강사단 구성 및 2회에 걸친 간담회 실시

### 2002년 10월

- 10월 4일 제26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신체감정서 허위발급 등 진정사건 105건 처리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 나카야마 타로 회장등 11명이 위원회 활  
동과 한국의 인권상황 파악코자 방문
- 10월 7일 제22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시설 및 처우 등에 관한 인권침해사건 등 86건 처리
- 10월 8일 인권자료운영자문단 1차 회의 개최
- 10월 10일 제27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시흥경찰서 가혹행위 논의 등 14건 처리
- 10월 14일 제27차 전원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형차별에 대한 구제권고 등 5건 처  
리 ☞ 소수 종교인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 권고(법무부)  
제20차 상임위원회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기획(안) 논의  
제28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건 전원위원회 상정
- 10월 17일 ‘사회적 신분’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29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육군 제7사단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조사 결정 등 109건  
처리
- 10월 18일 청와대 앞 통행권 침해사건 합의권고
- 10월 19일 캐나다 국제교정협회(International Corrections & Prisons  
Association)가 네덜란드 노르트바이케르후트에서 개최한 제4차

- 국제교정협회연례회의에 참가(유현 위원, 최준석)
- 10월 20일 APF 주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인권교육 참가(정영선, 권혁일)
- 10월 21일 제23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형의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신규교원 임용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참고인 출석조사 등 66건 처리  
인권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도입
- 10월 22일 위원장 초청간담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장애인 운전면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10월 23일 경찰청장에 정밀신체검사 요건강화 등 권고, 알몸신체검사 실시한 구로경찰서 관련자,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10월 25일 인권자료운영자문단 2차 회의 개최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Ms. Fredrika Ornbrant 부대사 위원회  
현황 파악코자 방문
- 10월 27일 일본변호사협회주관 국제심포지엄 참가(남규선)
- 10월 28일 제21차 상임위원회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위한 수행팀 구성 및 기획안 의결 등 3건 처리  
제19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 권고(국회) 등 5건 처리  
제28차 전원위원회  
발산역 리프트 사고건 등 4건 처리
- 10월 29일 일본 인권포럼21 주최 국제인권강연 참가(정강자위원)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Mr. Tserendorj위원장 등 5명이 위원회 현황 및 한국 인권상황을 파악코자 방문
- 10월 30일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발산역 리프트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 10월 31일 청송 제2교도소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0월 위원회 로고 제작 완료

부 록

10월 인권영화 사업 계약(박광수 외 5명)

2002년 11월

- 11월 1일 제30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관련 직권조사 결정
- 11월 4일 제20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보건복지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 권고 및 비준 촉구서 국회 송부  
제3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육군 제32사단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조사 결정 등 89건 처리  
제24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행에 합의종결 등 57건 처리
-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발간
- 11월 8일 APF주관 국제조사관교육 참가(진수명, 김정학, 서수정)
- 11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7차 연례회의에 참석, APF에 정식회원으로 가입(위원장, 김덕현 위원, 사무총장, 최영란)
- 11월 10일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추진(2002.11.11~2003.5.31)
- 11월 12일 제22차 상임위원회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논의  
민주주의공동체회의 영국대표단 방문  
Adurey Glover UN인권위원회 영국대표단 단장 등 4명  
외국인노동자문제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 11월 15일 제32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인천 출입국관리소 중국동포 강제퇴거 해제권고 등 49건 처리
- 11월 18일 서울시장·도시철도공사사장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건 손해

- 배상 권고
- 11월 18일 제29차 전원위원회  
 ‘나이를 이유로 한 교수모집 차별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대학교  
 원 채용 응시연령 제한조항 삭제 및 응시연령 제한 철폐권고(교육  
 인적자원부, 14개 국공립대학교) 등 4건 처리  
 제25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사회적 신분(기간제 교사)에 의한 고용차별 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등 59건 처리
- 11월 19일 제6차 공무원 특채(지원자 134명, 채용인원 8명)
- 11월 20일 위원장 초청간담회(장애인 단체)
- 11월 25일 제21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권고(노동부) 등 2건 처리  
 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중간발표
- 11월 27일 제33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인천 부평구청, 인사권 남용 사건 합의권고 등 98건 처리
- 11월 28일 제23차 상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1주년 평가 워크숍 등 3건 논의  
 제26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인종에 의한 고용차별 진정사건 서울지검 이송 결정 등 32건 처리
- 11월 인권교육 강사용 모범 강의안 시리즈Ⅱ「교정과 인권」개발 및 배포
- 11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강사커뮤니티 운영 개시
- 11월~12월 직원 인권교육실시(국제인권협약과정)
- 11월 ‘버림받은 아동과 청소년’, ‘학대받는 노인’을 주제로 총 8개 시  
 설 방문조사 실시
- 11.20 울산양로원 방문(정강자 위원 외 3인)
- 11.22 서울시립소년의집(보육원) 방문(유시춘 위원 외 4인)

## 부 록

- 11.26 풍익보육원 방문(유시춘 위원 외 2인)
- 11.28 화성성혜원(부랑인시설) 방문(정강자 위원 외 4인)
- 11.29 청운양로원 방문(정강자 위원 외 3인)
- 11.29 YMCA청소년쉼터 방문(유시춘 위원 외 2인)
- 11.29 강남청소년쉼터 방문(김선민 외 1인)

## 2002년 12월

- 12월 2일 베트남국립인권연구소(VRCHR) 소장  
Adurey Glover UN인권위원회 영국대표단 단장 등 4명  
외국인노동자문제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 12월 6일 제22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주요 인권문제 WORKING GROUP 운영계획 등 4건 처리  
제34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산 만덕복음병원에 대한 고발조치 등 63건 처리
- 12월 7일 UN협의자격NGO회의(CONGO)가 2002년 1월 9일부터 13일까  
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아시아시민사회포럼에 참가(정강자 위  
원, 유인덕)
- 12월 8일 일본 인권의 날 기념행사 참가하여 위원회법 설명 및 일본 인권옹  
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강연(박경서 위원)
- 12월 9일 제30차 전원위원회  
교도소 징벌권 남용 등 11건 처리
- 12월 10일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설 보호시설 방문조사(위원회 2명, 전  
문가 1명, NGO 5명)  
인권논문공모사업 당선작(가작 3편) 시상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12월 13일 제7차 공무원 전입(지원자 3명, 채용인원 1명)

## 부 록

- 12월 16일 제27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서신검열 제도개선에 관한 진정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등 57건 처리
- 12월 18일 제35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경찰서 유치장 시설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조사 결정 등 49건 처리
- 12월 20일 2001년 12월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한 울산구치소 사망사건처리결과  
통보, 담당교도관 2명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 구치소내 가혹행위 내사종결
- 12월 23일 제31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개정(안)」 등 9건 처리  
제28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특별법 제정으로 무공수훈자 연금지급 건의 진정사건 각하 후 국가보훈처 이송 등 35건 처리  
제8차 공무원 전입(지원자 1명, 채용인원 0명)
- 12월 30일 주요기업의 채용상 차별관행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제24차 상임위원회  
형사소송법 및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 2건 의결  
제29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주요기업 채용상 차별관행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 등 32건 처리
- 12월 31일 진정접수 건수 총 3,593건(면전진정 556건)
- 12월 「인권길라잡이-교정편」, 「인권길라잡이-경찰편」 발간
- 12월 교도관 인권교육용 영상교재 제작
- 12월 인권교육 강사를 위한 표준 교안 시리즈 개발(경찰, 교정, 검찰 3종)
- 12월 인권교육 강사용 모범 강의안 시리즈Ⅲ 「검찰과 인권」 개발 및 배포
- 12월 「인권길라잡이-검찰편」개발완료

## 부 록

- 12월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보고서 발간(초·중·고등학교 3편)
- 12월 인권교육 강사용 모범 강의안 시리즈Ⅳ 「군대와 인권」 개발 완료
- 12월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지침서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길잡이」 발간
- 12월 「우리 교과서 인권이야기」 제작
- 12월 버림받은 어린이, 학대 받는 노인을 주제로 한 인권동화책 「아추 영감」, 「엄마, 엄마」 2종 및 메뉴얼 「인권동화 잘 읽기」 2종 제작
- 12월 전국 초등학교 교사 대상 「인권동화책을 활용한 인권교육 워크숍」
- 12월 인권만화 제작 완료(박재동 외 9명)
-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
- 12월 인권광고(열쇠편 제작 및 방송)



## 국제기구 권고사항

### □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영문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66. 12. 16 / 1976. 1. 3 / 1990. 7. 10
당사국 수	146(2002. 12. 9 기준)
조약감시기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정부보고서	1994. 1. 5 / 1999. 10. 12
반박보고서	1995 / 2001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 1 9 9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li> <li>· 노조결성, 교사단결권</li> <li>· 파업의 과도한 제한</li> <li>· 경찰의 노조활동공격</li> <li>· 여성차별(가정폭력, 고용차별 등)</li> <li>· 높은 산업재해</li> <li>· 영세업체 최저임금 배제</li> <li>· 외국인근로자 차별</li> <li>· 의무교육 기회 부족</li> <li>· 고등교육 기회 부족</li> <li>· 저소득층 교육기회 부족</li> <li>· 열악한 주거환경</li> <li>· 강제철거</li> <li>· 취약계층 지원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보장</li> <li>· 규약에 대한 교육</li> <li>· 규약의 사법절차 적용</li> <li>· 국내법과 규약의 일치노력</li> <li>· 단결권, 파업권 보장</li> <li>· 여성차별철폐, 구체적 프로그램 작성</li> <li>· 산업안전 강화</li> <li>· 최저임금제 전면실시</li> <li>· 외국인근로자 동등대우</li> <li>· 주거권 보장</li> <li>· 의무교육,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li> <li>· 인권교육의 실시</li> <li>· 극빈, 무주택, 장애인 복지제도 확충</li> </ul>

부 록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2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 2 0 0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해고와 감원, 고용안정성의 퇴보, 수입불균형, 결혼가정의 증가, 많은 사람들을 주변화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li> <li>· 급속한 경제발전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li> <li>· 실업, 불안전 고용, 주택보급, 빈곤, 이주에 대한 통계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는 정부와 다른 기구가 제공하는 통계와 큰 차이가 있음.</li> <li>· 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짐으로써 특별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음</li> <li>·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남아선호, 여아낙태에 의한 여성의 재생산권 위협, 호주제도, 가정폭력, 낮은 고등교육율, 여성 차별, 직장내 성희롱, 남녀의 평균임금차이)</li> <li>· 비정규직 차별</li> <li>· 높은 산업재해</li> <li>· 교사들의 단체교섭 및 파업금지</li> <li>· 파업에 대한 불법화</li> <li>·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li> <li>· 도시의 인구집중 및 시골의 공동화(정부정책의 도시집중화)</li> <li>· 기초생활보장법, 연금법</li> <li>· 장애인 의무고용 쿼터제 불이행</li> <li>· 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거주 제공 미비</li> <li>· 높은 사설의료기관 비율로 인한 주변화 된 집단의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li> <li>· 질 낮은 공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li> <li>·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 부족</li> <li>· 의무교육 기회 부족</li> <li>· 과도하게 엄격한 난민지위 인정기준</li> <li>· 인권교육이 인권관련 종사자들의 필수교육과목에 포함되지 않음</li> <li>· 국가보안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관련기구와 관계부처는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검토</li> <li>·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li> <li>· 규약에 모든 국내법보다 우선적인 지위 보장</li> <li>· 비정규직의 권리보장</li> <li>· 교사,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파업권 보장</li> <li>· 아동성매매와 아동 노동금지 및 피해자들의 보호와 복구를 위한 프로그램확대</li> <li>· 정부내 주택문제 지원을 위한 진정을 다루는 담당관 지정</li> <li>·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거주지 제공</li> <li>· 공교육제도 강화계획수립(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계획, 사교육에 비한 공교육 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연구,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 재평가)</li> <li>· 인권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 실시</li> <l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마련</li> </ul>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영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66. 12. 16 / 1976. 3. 23(단 제41조는 1979. 3. 28에 발효)/1990. 7. 10
당사국 수	148(2002. 12. 9 기준)
조약감시기구	인권이사회 혹은 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유보조항	제14조 5항 및 7항, 제22조, 제23조 4항, 제41조
유보철회	제23조 4항을 1991. 3. 15에 유보철회 / 제14조 7항을 1993. 1. 21에 유보철회
정부보고서	1991 / 1998. 8. 20
반박보고서	1992 / 1999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 1 9 9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과 규약불일치</li> <li>· 평등권 불철저</li> <li>· 국가보안법</li> <li>· 안보상황 과대평가</li> <li>· 경찰력 과도사용</li> <li>· 안기부 수사권 행사</li> <li>· 북한방문 금지</li> <li>· 재소자전향제도</li> <li>· 광범위한 국가기밀</li> <li>· 사형규정범죄 과다</li> <li>· 기소전 구금기간 과다</li> <li>· 정치적 투옥</li> <li>· 여성차별</li> <li>· 죄형법정주의</li> <li>· 집회와 시위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약과 헌법 일치노력</li> <li>· 국가보안법 점진적 폐지</li> <li>· 사형규정 범죄 축소</li> <li>· 죄형법정주의 준수</li> <li>·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li> <li>· 규약에 대한 유보 철회</li> <li>· 인권규약에 대한 교육· 홍보</li> </ul>

부 록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2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 1 9 9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헌법 제6조를, 규약 가입 후 시행된 법은 규약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함.</li> <li>·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지속적 적용</li> <li>· 국가보안법상 불합리하게 광범위한 반국가조직, 고무 행위의 범위</li> <li>·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가부장제 사회(태아성감별, 불균형적인 남녀 성비, 높은 모성사망률)</li> <li>· 가정폭력과 부적절한 법과 관행</li> <li>· 강간피해여성에 저항의 증거 요구, 고소를 피하기 위해 강간 피해여성과 혼인, 부부간간을 범죄시 하지 않음.</li> <li>· 여성의 고용차별, 소기업 고용 여성에 대한 보호미흡, 남녀간의 임금격차</li> <li>· 피의자 구속에 대한 제한적 실질심사</li> <li>· 지나치게 긴 재판 전 구금 기간</li> <li>·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li> <li>·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결수에 대한 준법서약제도</li> <li>· 판사 재임용제도에 의한 사법적 독립성 침해</li> <li>· 광범위한 도청과 정보의 남용</li> <li>· 집회장소에 대한 지나친 제한</li> <li>·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의 자유제한</li> <li>· 유보조항(규약 제14조 5항: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 제22조: 노동조합 결성, 결사의 자유)</li> <li>· 규약위반에 대한 구제 미흡</li> <li>·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li> <li>· 국가보안법 제7조의 긴급한 개정</li> <li>· 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를 약화시키는 현존 법규정을 없애고, 가정폭력방지법을 강화</li> <li>· 남녀차별금및구제에관한법의 효과적 이행과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기회와 조건보장</li> <li>· 체포, 구금에 대한 본 규약 제9조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li> <li>· 고문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li> <li>· 형사절차 개혁</li> <li>· 준법서약제 폐지</li> <li>· 법관임용제도에 대한 완전 정보공개</li> <li>·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입법</li> <li>· 집회장소 제한 폐지</li> <li>· 조약 유보조항 철회</li> <li>· 개인통보(진정)에 대해 국내법이 아니라 규약이 정한대로 보상</li> <li>· 공무원, 의료인 등에게 인권교육 실시</li> </ul>

□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  
방지에관한협약

영문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Punishment (CAT)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84. 12. 10 / 1987. 6. 26 / 1995. 2. 8
당사국 수	130(2002. 8. 21 기준)
조약감시기구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정부보고서	1996. 5
반박보고서	1996. 11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 부 보 고 서 에 대 한 권 고 의 건 ( 1 9 9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법상 고문범죄에 대한 정의부재</li> <li>· 자백유도를 위한 고문</li> <li>· 피의자에 대한 장기간 심문</li> <li>· 고문범죄 책임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미흡</li> <li>·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li> <li>· 고문피해자 보상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문범죄규정 도입</li> <li>· 인권조약과 인권보호 기준에 따른 국내 법 정비</li> <li>· 경찰, 검찰 등 법집행 공무원과 의료 인들에 대한 인권교육</li> <li>· 구금, 수감장소를 감찰하는 독립적 정부 기구 설치</li> <li>· 고문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위원회에 조사결과 보고</li> <li>· 구속기관 단축</li> <li>·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li> <li>· 고문방지조약 유보조항(다른 당사국의 불이행에 대해 통보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가 심리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 당사국의 개인이 위원회에 피해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조항) 철회</li> </ul>

부 록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영문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79. 12. 18 / 1981. 9. 3 / 1985. 1. 26
당사국 수	170(2002. 8. 21 기준)
조약감시기구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유보조항	제9조, 제16조 1항 중 (c),(d),(f),(g) 유보 비준
유보철회	16조 제1항 중 (c),(d),(f)를 1991. 3. 15에 유보철회 / 제9조를 1999. 8. 24에 유보철회
정부보고서	1986 / 1989 / 1995. 9.27 / 1998
반박보고서	1998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3 · 4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 1 9 9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조항(2,4,9,16조)</li> <li>·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의 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 부족</li> <li>· 남녀고용평등법이 차별에 대해 완전히 정의하고 있지 않음.</li> <li>· 여성폭력의 만연</li> <li>· 정책결정, 사법분야에 여성참여 미흡</li> <li>· 직장내 성희롱, 사적부문(private sector)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미흡,</li> <li>· 직종분리, 남녀임금격차, 고급여성 인력 고용기회 미흡,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부족</li> <li>· 우선해고와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의 증가</li> <li>· 농촌여성의 지위하락</li> <li>· 여성특별위원회의 지위와 예산</li> <li>· 남녀차별적인 최하 혼인연령제한</li> <li>· 높은 낙태율</li> <li>· 불평등한 상속법</li> <li>· HIV/AIDS여성정보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약에 일치하도록 헌법과 기타 관련법에서 차별정의</li> <li>· 2000년 이전에 유보조항 철회</li> <li>· 성별분리통계자료에 의한 법과 정책이행에 대한 상세한 보고</li> <li>· 법률지원에 대한 홍보 및 법에 대한 여성의 이해를 돕기위한 대책수립</li> <li>· 차별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li> <li>· 법률가, 의료인, 법집행관 등에 대한 성인지적 훈련등 종합대책 마련</li> <li>·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설치</li> <li>· 여성의 정치참여 및 교육지원, 여성지도자에 대한 인식향상, 정당의 여성쿼터제(30%) 도입, 사적부문에도 여성쿼터제 도입</li> <li>· 파트타임 여성노동자 증가에 대한 통계 제공</li> <li>·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행 및 여성의 무모수 노동 인식</li> <li>· 공사영역 여성 동일보호</li> <li>· 유급출산휴가 연장</li> <li>· ILO조약 110, 111호 비준</li> <li>· 성별 제한적인 채용 및 광고 제거</li> <li>·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신고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li> <li>· 농촌여성의 지위와 복지보호</li> <li>· 장애여성의 사회보장</li> </ul>

## □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영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89. 11. 20 / 1990. 9. 2 / 1991. 12. 20
당사국 수	191(2002. 8. 21 기준)
조약감시기구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보조항	제9조 3항, 제21조 (a), 제40조 2항 (b),(v) 유보 비준
정부보고서	1994 / 2000
반박보고서	1996 / 2002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 1 9 9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유보조항(9조3항: 아동의 부모 면접권보장, 21조 a항: 입양 절차 제한, 40조 2항 5호: 형법위반 아동에 대한 심사)</li> <li>· 조약이행, 감시체제미흡</li> <li>· 아동관련 정책 평가를 위한 양적, 질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대책 부족</li> <li>·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관, 심리학자, 보건인 등 아동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조약내용 교육 부족</li> <li>·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이행 미흡</li> <li>· 여아, 장애아, 혼외아동에 대한 배려부족</li> <li>· 가족에 대한 지원부족</li> <li>· 국적권, 사상, 양심, 표현, 결사, 집회자유 미흡</li> <li>· 입양아동의 이익에 대한 배려부족</li> <li>·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아동유기와 아동가장</li> <li>· 체벌의 만연</li> <li>· 경쟁적 풍토의 교육</li> <li>· 아동고용문제</li> <li>· 소년사법제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약유보철회</li> <li>· 조약교육, 홍보 강화</li> <li>· 여아, 장애아, 혼외출생자보호, 남녀 차별적인 최하 혼인연령인 제한 폐지</li> <li>· 아동관련전문가 교육 실시</li> <li>· 국내법과 조약의 일치(비차별, 이동의 최대이익, 아동의 견해존중)</li> <li>· 아동옴부즈만 혹은 이와 동등한 독립적인 진정, 감시 기구 설치 및 민간단체와 협력</li> <li>· 국적법개정</li> <li>· 아동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법과 분리지표체계 마련</li> <li>· 체벌금지</li> <li>· 최소 고용연령 조정</li> <li>· 입양제도 개선</li> <li>· 아동권리에 국가자원 배분 강화</li> <li>·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아동참여 강화</li> <li>· 양심, 표현, 결사자유보장</li> <li>· 가족지원, 아동가장 지원 확대</li> <li>·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감시체제 구축</li> <li>· 교육정책 재검토</li> <li>· 소년사법제도 개선</li> <li>· 위원회 회의록과 권고의 홍보</li> </ul>

## 부 록

## □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영문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66. 3. 7 / 1969. 1. 4 /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에 적용)
당사국 수	162(2002. 8. 21 기준)
조약감시기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정부보고서	1980 / 1982 / 1984 / 1986 / 1988 / 1990 / 1992 / 1996. 5. 30 / 1998(9·10차 합본)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8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 1 9 9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차별금지규정 미흡</li> <li>· 인종차별처벌규정 부재</li> <li>· 외국인거주자 차별</li> <li>· 혼혈아동 차별</li> <li>· 의견의 자유보장 미흡</li> <li>· 외국인근로자 차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차별금지규정 도입</li> <li>· 인종차별처벌조항 도입</li> <li>· 외국인거주자 차별 철폐</li> <li>· 인종·외국인 관련 정보제공</li> <li>· 외국인근로자 보호</li> </ul>
제 9 · 10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 1 9 9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의 부재</li> <li>·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의 부재</li> <li>· 외국인 노동자(특히 불법노동자)와 거주자의 불안정한 지위</li> <li>· 혼혈아동 및 망명 희망자와 혼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li> <li>·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대책 마련</li> <li>· 외국인거주자 차별 철폐</li> <li>· 인종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li> <li>·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확산하고 교육, 훈련 위한 자원제공</li> </ul>



##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인권관련 유엔회의	
총회 (General Assemb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유엔의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토의할 수 있음</li> <li>· 특정지역의 인권침해 사태가 총회에서 주요 토의 의제가 되며, 그 결과 일정한 권고가 채택되기도 함</li> <li>· 국제인권규범을 정립하는 장으로의 역할이 업적</li> </ul>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의 6대 주요기관 중 인권 문제를 업무상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li> <li>·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음(유엔헌장 제62조 제2항)</li> <li>· 협약안 작성 총회제출 및 국제회의 소집 권한</li> </ul>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1974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인권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설립 (결의 5)</li> <li>· 회기 : 위원국들은 1년에 3~4월 6주간 제네바에서 회의</li> <li>· 목적 : (a)국제적 인권규범의 수립 (b)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진정서 심의, 결과보고 (c)유엔 내의 새로운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의 제안 (d)인권관련 활동에 대한 자문 (e)인권소위 보고 검토</li> <li>· 구성 : 53개국 대표로 구성된 정치적 기구의 성격이며 임기는 3년 / 산하 보조기관으로 인권소위(Sub-CHR),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및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실무그룹(Working Group),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 내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의해 설치되었다.</li> </ul>
인권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1974 인권위원회 설립시 산하에 설치</li> <li>· 회기 : 매년 제네바에서 4주간의 회기</li> <li>· 목적 : (a)인권 권리장전에 입각한 각종 인권선언 및 협약 초안작성 (b)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문제에 관한 인권위에 권고 (c)인권관계 진정서 심의 및 결과 인권위에 권고 (d)기타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위에서 위임하는 인권문제</li> <li>· 구성 : 지역배분 원칙에 따라 인권소위원회 위원(expert)은 개인 자격으로 26명 선출 / 임기4년 / 각국별 정위원 및 교체위원 각 1명으로 구성</li> <li>· NGO와 밀접한 연대 유지</li> </ul>

부 록

유엔인권기구	
<p>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1993년 총회의 결의(48/141)으로 사무국 내에 설치</li> <li>· 1대 고등판무관 Mr. Jose Ayala-Lasso, 에콰도르 ('94-'97)</li> <li>· 2대 고등판무관 Ms. Mary Robinson, Ireland ('97-'02)</li> <li>· 3대 고등판무관 Mr. Vieira de Mello ('02~)</li> <li>· 목적 : (a)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세계적인 협력관계 구축 (b)인권 침해 방지와 긴급상황에 대처 (c)지속적인 평화원칙에 따라, 인권증진·민주주의·발전 증진 (d)전 유엔 조직에 걸친 유엔 인권 프로그램 강화 조정 (e)인권 조약 감시 기구 등의 활동 지원</li> <li>· 구성 : 제네바 본부의 200여명의 직원과 함께 상설기구로 설치, 세계 각국에 지부 설치</li> <li>· 1982년 설치된 인권센터가 인권고등판무관실 신설과 함께 통합됨</li> </ul>
<p>난민고등판무관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1951년 총회 결의(319/1949)에 의해 실시</li> <li>· 9대 고등판무관 Mr. Ruud Lubbers ('01~)</li> <li>· 목적 :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li> <li>· 구성 : 53개국 정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예산 책정, 승인, 감독,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 100여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li> </ul>
인권조약감시기구 (개별조약에 근거)	
<p>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혹은 사회권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협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li> <li>·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8명</li> <li>· 회의일정 : 매년 1회 제네바에서 개최</li> <li>·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2년, 매 5년</li> </ul>
<p>인권이사회 혹은 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협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li> <li>·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8명</li> <li>· 회의일정 : 매년 1회 제네바에서 개최</li> <li>·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5년</li> </ul>
<p>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li> <li>·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23명</li> <li>· 회의일정 : 매년 1회 비엔나와 뉴욕에서 교대로 개최</li> <li>·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4년</li> </ul>
<p>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Rights of the Chil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협약 : 아동권리협약(CRC)</li> <li>·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0명</li> <li>· 회의일정 : 매년 1회 개최</li> <li>·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2년, 매 5년</li> </ul>

## 부 록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CERD)</li> <li>·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8명</li> <li>· 회의일정 : 매년 2회 제네바에서 개최</li> <li>·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2년</li> </ul>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협약 : 고문방지협약(CAT)</li> <li>·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0명</li> <li>· 회의일정 : 매년 1회 제네바에서 개최</li> <li>·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4년</li> </ul>
<b>기타 인권관련 유엔 전문기구</b>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65년</li> <li>· 목적 :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li> <li>· 구성 : 전세계 131개국의 지부를 통하여 166개국에 대한 원조</li> <li>· 기능 : 특별기금조성, 기술원조 사업, '인간개발보고서' 발간 등</li> </ul>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64년</li> <li>· 목적 : 개발도상국의 국제경제로의 통합 및 무역개발</li> <li>· 구성 : 192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상설사무국이 있음</li> <li>· 기능 : 무역 및 경제관련 정부간 토론, 연구, 정책분석 및 자료수집, 기술지원 등</li> </ul>
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46년 유엔 총회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1953년 상설화</li> <li>· 목적 : 개발도상국 등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이에 대한 원조</li> <li>· 구성 : 세계 36개국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7개 지방사무소 및 126개 국가사무소를 가지고 160개국에 대한 원조를 하고 있으며, 정부 및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됨</li> <li>· 기능 : 아동에 대한 구호물자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아동인권 보호</li> </ul>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19년, 1946년 유엔이 출범하면서 최초 유엔 전문기관으로 명명</li> <li>· 목적 : 기본노동권의 최소기준을 조약 혹은 권고의 형식으로 국제노동기준을 구축하여, 사회정의 및 노동권,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함</li> <li>· 구성 : 각국의 노사정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회 개최되는 총회, 3회 개최되는 이사회 및 상설 사무국을 가지고 있음</li> <li>· 기능 : (a)기본노동권의 최소기준을 조약 혹은 권고의 형식으로 국제노동기준을 구축, (b)노동정책 및 직업훈련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li> </ul>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유네스코 헌장은 1946년 발효하면서 설립</li> <li>· 목적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가간 협력증진 및 세계의 안보와 평화 구축</li> <li>· 구성 : 188개 회원국('99. 10. 19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총회와 집행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기능 : (a)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b)대중 교육과 문화 보급 촉진 및 장려 (c)지식의 유지, 증대, 전파, 추구</li> </ul>

부 록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48년 유엔의 특별기구로서 설립</li> <li>· 목적 : 인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li> <li>· 구성 : 192개의 회원국 보유, 세계보건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기능 : (a)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b)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c)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li> </ul>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45년</li> <li>· 목적 : 삶의질과 영양공급의 증진,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업 조건 향상</li> <li>· 구성 : 183개국과 유럽연합이 회원국으로 되어있으며, 총회, 이사회와 8 개국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국으로 구성</li> <li>· 기능 : 지속가능 농업과 농업여건의 향상 (b)식량생산증가를 위한 장기적 전략 (c)천연자원 보전과 식량안보</li> </ul>
<b>인권관련 유엔 독립기구</b>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유엔헌장에 근거한 유엔의 주요사법기구로서 1946년 설립되었고, ICJ 성문법이 존재</li> <li>· 목적 : 국가간 법적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국제기구의 법적 자문</li> <li>· 구성 : 9년 임기를 가진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의해서 각각 선출됨. 국가별 재판관은 최대 1인</li> </ul>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년 설립노력에 결과로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조약(Rome Statute)이 60개국 이상이 비준되어 발효됨</li> <li>· 목적 :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li> <li>· 특징 : ICJ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 개인을 형사처벌한다는 차이점이 있음</li> </ul>
<b>주요 국제 인권 NGO</b>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61년, 영국 런던</li> <li>· 목적 : 모든 양심수의 석방, 정치범에 대한 공정한 재판, 고문과 사형제도 폐지, 모든 비사법적인 처형과 실종의 종식</li> <li>· 기능 : 방대한 국제적 조직망을 바탕으로 연대서한을 발송하며, 연례보고서를 발간</li> </ul>
인권감시그룹 (Human Rights Wat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75년 타결된 헬싱키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NGO로 출범</li> <li>· 목적 : 세계 70개 나라의 인권상황을 감시</li> <li>· 기능 :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 조사, 연구 및 자료 발간</li> </ul>
인권인터넷 (Human Rights Inter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76년, 캐나다 주재</li> <li>· 목적 : 세계 인권공동체의 정보교환</li> <li>· 특징 : 세계 인권관련 5000개 기관 및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활동가와 인권기관을 정보화 차원에서 돕고,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인권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하는 것을 추구함</li> </ul>

부 록

국제인권옹호연맹 (International League of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42년, 뉴욕</li> <li>· 목적 : 개인에 대한 정치적 인권보호</li> <li>· 특징 : 주로 유엔, 유네스코, ILO 등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행사가 목표</li> </ul>
국제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52년, 베를린에서 설립되어 제네바에 본부</li> <li>· 목적 : 법치주의와 인권향상</li> <li>· 특징 : 60개국 이상의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아프리카 통일기구(OAU), 유럽평의회 등의 협의자격을 부여 받음</li> </ul>
국제민주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46년 파리에서 창립되어 브뤼셀에 소재</li> <li>· 목적 :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 불의에 반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li> <li>· 특징 :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80개국 법률가들로 구성</li> </ul>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86년, 홍콩에 본부</li> <li>· 목적 : 아시아 지역의 인권 의식 확산, 인권침해 희생자들 구제를 위한 국제적, 아시아적 여론 형성</li> <li>· 특징 : 아시아지역 법률가 및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8년 아시아인권헌장(Asian Human Rights Charter)을 발표하는 등 아시아 지역 인권시스템 구축에 큰 노력을 하고 있음</li> </ul>
아시아인권교육정보센터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1992년</li> <li>· 목적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고 홍보</li> <li>· 기능 : (a)시민을 위한 교육 교재 개발 (b)홍보 (c)자료의 DB구축 (d) 인권교육기구들의 네트워크 구축 (e)인권교육 전문성의 교류 (f)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유엔인권교육10개년행동계획 이행을 촉진</li> </ul>

##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협 약 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2.12.9.기준)	우리나라 가입(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집단살해죄의방지과처벌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8. 12. 9 (’51. 1. 12)	133	’50. 10. 14 (’51. 12. 12)	
부녀자의정치적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52. 12. 20 (’54. 7. 7)	115 ’02. 8. 25 기준	’59. 6. 23 (’59. 9. 21)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에 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49. 12. 2 (’51. 7. 25)	74	’62. 2. 13 (’62. 5. 14)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54. 9. 28 (’60. 6. 6)	54	’62. 8. 22 (’62. 11. 20)	
<b>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 협약</b>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5. 12. 21 (’69. 1. 4)	165	’78. 12. 05 (’79. 1. 4)	14조 선언 (’97. 3. 5)
<b>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 관한협약</b>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9. 12. 18 (’81. 9. 3)	170	’84. 12. 27 (’85. 1. 26)	16조1항 (g) (16조1항 중 (c),(d),(f) ’91. 3. 15 철회 / 9조 ’99. 8. 24 철회)

## 부 록

협 약 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2.12.9.기준)	우리나라 가입(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 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6. 12. 16 (’76. 1. 3)	146	’90. 4. 10 (’90. 7. 10)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149	’90. 4. 10 (’90. 7. 10)	14조5항, 22조 (23조4항 ’91. 3. 15 유보 철회 / 14조7항 ’93. 1. 21 유보철회)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104	’90. 4. 10 (’90. 7. 10)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 11. 20 (’90. 9. 2)	191	’91. 11. 20 (’91. 12. 20)	9조3항, 21조(a), 40조2항 (b),(v)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51. 7. 28 (’54. 4. 22)	140	’92. 12. 3 (’93. 3. 3)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체 약국의 영역에서 3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입 법상의 상호주의를 면제한 다고 규정한 제7조 유보  선언내용: 대한민국은 제1 조 A에 규정된 “1951년 1 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 건”이라는 용어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는 것을 이 협약 제 1조 B에 따라 선언한다.

## 부 록

협 약 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2.12.9.기준)	우리나라 가입(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67. 1. 31 (’67. 10. 4)	138	’92. 12. 3 (’92. 12. 3)	대한민국은 체약국의 영역 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 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 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 유보
고용정책에관한협약 (ILO협약 no.122) Convention Concerning Employment Policy	’64. 7. 9 (’66. 7. 15)	93	’92. 12. 9 (’93. 12. 9)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 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 의방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4. 12. 10 (’87. 6. 26)	132	’95. 1. 9 (’95. 2. 8)	
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근로 자의동일보수에관한협약(ILO 협약 no.100) 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51. 6. 29 (’53. 5. 23)	160	’97. 12. 8 (’98. 12. 8)	
고용과직업상의차별에관한 협약(ILO협약 no.111)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58. 6. 25 (’60. 6. 15)	158	’98. 12. 4 (’99. 12. 4)	
아동의무력분쟁관계에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00. 5. 25 (’02. 2. 12)	42	(서명 ’00. 9. 6)	



## 부 록

협 약 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2.12.9.기준)	우리나라 가입(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아동매매,아동매춘및아동포르 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00. 5. 25 (’02. 1. 18)	42	(서명 ’00. 9. 6)	대한민국은 체약국의 영역 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 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 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 유보
기업의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보호및편의에관한 협약(ILO협약 no.135) 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and Facilities to be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71. 6. 23 (’73. 6. 30)	73	’01. 12. 27 (’02. 12. 27)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8. 7. 17 (’02. 7. 1)	88	’02. 11. 13 (’03. 2. 1)	

## 발간자료 목록

번호	자료명	저(편)자	발행	담당부서
1	영국 인종평등위원회 조사보고서	조효제	2001. 10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2	미국 장애인법 개설	국가인권위원회	2002	차별조사2과
3	언론가이드라인 준비 자료집 1 : '언론과 인권' 학술·기고문 모음집	"	2002	공보담당관실
4	언론가이드라인 준비 자료집 2 : 인권관련 매체비평 모음집	"	2002	"
5	언론가이드라인 준비 자료집 3 : 언론관련 가이드라인·윤리강령 모음집	"	2002	"
6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강의안 시리즈 1 : 경찰과 인권	신익기 외	2002. 10	인권교육담당관실
7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 사회적 신분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02. 10	차별조사국
8	APF 연례회의 참고자료 부록 1 :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	2002. 10	국제협력담당관실
9	APF 연례회의 참고자료 부록 2 : 인권과 장애인	"	2002. 10	"
10	2002년도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 질문지·조사표 모음집	설동훈 편	2002. 10	인권연구담당관실
11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강의안 시리즈 2 : 교정과 인권	이승호 외	2002. 11	인권교육담당관실
12	국제인권협약집 (2002 직원인권교육교재)	국가인권위원회	2002. 11	"
13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	2002. 11	법제개선담당관실
14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강의안 시리즈 3 : 검찰과 인권	심희기 외	2002. 12	인권교육담당관실
15	국가인권위원회 기사모음집 1 : 2001.10.5 ~ 2002.5.28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공보담당관실

## 부 록

번호	자료명	저(편)자	발행	담당부서
16	국가인권위원회 기사모음집 2 : 2002.5.28 ~ 2002.12.27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공보담당관실
17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02. 12	법무담당관실
18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1권	"	2002. 12	국제협력담당관실
19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2권	"	2002. 12	"
20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3권	"	2002. 12	"
21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4권	"	2002. 12	"
22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5권	"	2002. 12	"
23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6권	"	2002. 12	"
24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2. 12	인권연구담당관실
25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제7차 연례회의 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국제협력담당관실
26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제7차 연례회의 참고자료 2	"	2002. 12	"
27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문용린	2002. 12	인권교육담당관실
28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재활복지대학	2002. 12	인권연구담당관실
29	B형간염보균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 학원, 노동건강연대	2002. 12	"
30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법무법인 지평	2002. 12	차별조사1과
31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이경주 외	2002. 12	정책총괄과
32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 (1)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차별조사2과

## 부 록

번호	자료명	저(편)자	발행	담당부서
33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12	인권연구담당관실
34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 200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행정개혁시민연합	2002. 12	차별조사국
35	교사의 인권인식 조사 연구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부산교육연구소	2002. 12	인권교육담당관실
36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 12	인권연구담당관실
37	무료및실비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12	"
38	부랑인복지시설내 노인인권현황조사	한국도시연구소	2002. 12	"
39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한국노인의전화	2002. 12	"
40	취학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조사	동의대학교	2002. 12	"
41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강순원 등저, 인권교육담당관실 편	2002. 12	인권교육담당관실
42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김은실 외	2002. 12	인권연구담당관실
43	인권 길라잡이 - 검찰편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3)	심희기 외	2002. 12	인권교육담당관실
44	인권 길라잡이 - 경찰편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2)	신의기 외	2002. 12	"
45	인권 길라잡이 - 교정편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1)	이승호 외	2002. 12	"

## 진정서 양식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 년 월 일 시 분		
<b>진 정 서</b>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언제 ( ) <input type="checkbox"/>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언제 ( ) <input type="checkbox"/> 누구 ( )			

부 록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input type="checkbox"/>		
긴급구제조치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Complaint Form

**1. Complainant** (In case the complainant is an organization, please give us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and its representative.)

- ① Name: Ms./Mr. \_\_\_\_\_  
 ② Resident Registration No./Passport No.: \_\_\_\_\_  
 ③ Nationality/Citizenship: \_\_\_\_\_  
 ④ Address in Korea: \_\_\_\_\_  
 ⑤ Telephone: \_\_\_\_\_ ⑥ Fax: \_\_\_\_\_ ⑦ E-mail: \_\_\_\_\_

*If you are filing a complaint on behalf of someone else,*

**2-1. Victim whose rights are violated or who is aggrieved by the unlawful discrimination**

- ① Name: \_\_\_\_\_  
 ② Resident Registration No./Passport No.: \_\_\_\_\_  
 ③ Nationality/Citizenship: \_\_\_\_\_  
 ④ Address in Korea: \_\_\_\_\_  
 ⑤ Telephone: \_\_\_\_\_ ⑥ Fax: \_\_\_\_\_ ⑦ E-mail: \_\_\_\_\_  
 ⑧ Relationship to the complaint: \_\_\_\_\_  
 ⑨ Others: \_\_\_\_\_

**2-2. Does a victim know that you are complaining on behalf of her/him?**

- ① Yes. And a victim wants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ission. ☐  
 ② Yes. But a victim does not want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ission. ☐  
 ③ No. A victim does not know that I am complaining. ☐  
 ④ Yes. But it is uncertain if a victim wants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ission. ☐

**3. Respondent** (Any entities, including governmental agencies, private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that violated the rights of the affected person or discriminated against such a person.)

- ① Name: \_\_\_\_\_ ② Organization Name: \_\_\_\_\_  
 ③ Address in Korea: \_\_\_\_\_  
 ④ Telephone: \_\_\_\_\_ ⑤ Fax: \_\_\_\_\_ ⑥ E-mail: \_\_\_\_\_

**4. Previous records of filing a complaint (with the same fact) to the Commission or other agencies.**

- ① Have you ever made a complaint to any investigation agency?  
 Yes ☐ No ☐

**부 록**

② Have you ever filed a complaint with agencies, such as a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or others, for any relief procedure?

(If so,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mplainant, when and where a complaint was filed, and the case or reference number of the complaint.)

③ Have you ever made a complaint with the same fact to the Commission before? Yes ☐ No ☐

(If so, please give us the information on the date and reference number of the complaint and the name of the complainant.)

**5. References**    ☐ ☐    ☐ ☐

**6. Details about the Complaint**

(Please describe the fact or case that you are complaining about, including what happened, where and when it happened, who a victim is, who the respondent is, and all the detailed information that you know.)

(If you need more space, attach additional pages.)

With respect to the above complaint

• I want it to be closed after counseling. ☐

• I want it to be filed in the Commission. ☐

Date \_\_\_\_\_ Signature \_\_\_\_\_

**Do not write in this space.**

Date \_\_\_\_\_

Person in charge: Title \_\_\_\_\_ Name \_\_\_\_\_ Signature \_\_\_\_\_



## Жалобное прошение

① Имя, Фамилия, Пол : \_\_\_\_\_

②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или номер паспорта : \_\_\_\_\_

③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 \_\_\_\_\_

④ Адрес в Корее : \_\_\_\_\_

⑤ Телефон : \_\_\_\_\_ ⑥ Факс : \_\_\_\_\_ ⑦ E-mail : \_\_\_\_\_

① Имя, Фамилия, Пол : \_\_\_\_\_

②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или номер паспорта : \_\_\_\_\_

③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 \_\_\_\_\_

④ Адрес в Корее : \_\_\_\_\_

⑤ Телефон : \_\_\_\_\_ ⑥ Факс : \_\_\_\_\_ ⑦ E-mail : \_\_\_\_\_

⑧ Отношение к пострадавшему : \_\_\_\_\_

⑨ Иные сведения : \_\_\_\_\_

① Да. И пострадавший хочет расследования его дела Комиссией. ☐

② Да. Но пострадавший не хочет, чтобы Комиссия расследовала его дело. ☐

③ Нет. Пострадавший не знает, что я обращаюсь с жалобой по его делу. ☐

④ Да. Но не совсем ясно пострадавший хочет ли расследования его дела. ☐

① Имя : \_\_\_\_\_ ② Название организации : \_\_\_\_\_  
③ Адрес в Корее : \_\_\_\_\_  
④ Телефон: \_\_\_\_\_ ⑤ Факс: \_\_\_\_\_ ⑥ E-mail: \_\_\_\_\_

부 록

4. Предыдущие материал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данного дела в нашей Комиссии или в другой организации.

① Обращались ли вы с жалобой в какую-либо организацию?

Да ☐ Нет ☐

② Обращались ли вы с жалобой в т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к суд,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или подобные за помощью?

(Если ДА, напишите имя пострадавшего, когда и куда вы обращались с жалобой, и укажите номер регистрации дела)

③ Обращались ли вы с жалобой в нашу Комиссию с тем же самым делом?

Да ☐ Нет ☐

(Если ДА, напишите информацию о дате, номере регистрации жалобы и названии жалобы)

5. Имеются ли справки официальные бумаги ил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делом пострадавшего? Да ☐ Нет ☐

6. Подробности о жалобе пострадавшего

(Опишите детально факт или ситуацию, по поводу которых вы обращаетесь с жалобой, описания точного места и времени происшедшего факта, действий пострадавшего и ответчика, а также свидетелей происшедшего{если они были})

(Если вам недостаточно места на данной странице, используйт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листы)

Что касается к данной жалобе,

▪ Я прошу считать это дело закрытым, после ознакомления Комиссии с моим делом. ☐

▪ Я прошу считать моё дело принятым Комиссией к расследованию. ☐

Дата \_\_\_\_\_ Подпись \_\_\_\_\_

Заполняется регистратором  
수사기관 등에 진정, 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긴급구제 조치 ■필요 ■불필요  
날짜 : 20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_\_\_\_\_ 성 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

國家人權委員會規則 第7號

## 請 願 書

1. 請願人 (如是團體, 將團體名稱及代表姓名填入欄內)

- |         |            |             |
|---------|------------|-------------|
| 1. 姓名 : | 2. 身份證號碼 : | 3. 國籍 :     |
| 4. 住址 : |            |             |
| 5. 電話 : | 6. 傳真 :    | 7. E-mail : |

2-1. 受害人 (請願人與受害人不一致時填寫此欄)

- |              |            |             |
|--------------|------------|-------------|
| 1. 姓名 :      | 2. 身份證號碼 : | 3. 國籍 :     |
| 4. 住址 :      |            |             |
| 5. 電話 :      | 6. 傳真 :    | 7. E-mail : |
| 8. 與請願人的關係 : |            | 9. 其他       |

2-2. 請願人與受害人不一致時, 受害人是否知道請願之事? 是否希望調查?

- |                 |                       |
|-----------------|-----------------------|
| 1. 知道, 希望調查 ( ) | 2. 知道, 但不希望調查 ( )     |
| 3. 不知道 ( )      | 4. 知道, 但不清楚是否希望調查 ( ) |

3. 侵權人或實施不平等待遇的行為人是誰?

- |         |         |
|---------|---------|
| 1. 姓名 : | 2. 單位 : |
| 3. 電話 : |         |

4. 關於受害人所受侵害或不平等待遇

1. 是否向司法機關提出申訴・告發或請願?  
是 ( )                      否 ( )
2. 是否向法院或憲法法院提出採取補救措施的要求?  
是 ( )                      否 ( )

**부 록**

3. 就同一案件, 是否向國家人權委員會提出請願?

是 ( )                      否 ( )

如果有, 是何時, 所用姓名?

時間 ( )                      姓名 ( )

5. 請注明看到或了解受害人所受侵害及不平等待遇的人, 或者有助於證明事實的證據及資料.

※ 外國人請注明護照號碼或者外國人登記號碼.

6. 附件: 有 ( )                      沒有 ( )

7. 受害人受到何種侵害或不平等待遇?

1. 時間:                                      2. 地點:

3. 經過 (紙張不夠, 可另加續頁)

對於以上事件 ( ) 希望在商談后可以解決.

( ) 希望受理請願.

請願人                      (簽章)

如向司法機關提出請願・申訴, 調查即告終結 ( )

緊急補救措施:              需要 ( )                      不需要 ( )

200 年              月                      日

負責人:                      職務

姓 名:                      (簽章)

##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단체명		전화번호	
		전송(Fax)번호	
사 용 목 적 (구체적으로)			
행 사 내 용 (구체적으로)			
행 사 일 시			
참 석 인 원			
기타특기사항			

### 〈참고사항〉

- 배움터 사용은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의 인권관련 공개 토론회, 학술 세미나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단체의 내부행사,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신청목적외 사용시에는 당일행사 취소는 물론 행사중이라도 중지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한 행사내용대로 사용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_\_\_\_\_

직   위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